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 줘야 개혁 성공”

어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광주 대토론회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교육과정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선임위원인 박병선 한국교육학회 회장은 24일 광주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 교육이 새롭게 길러내야 할 인간상을 ‘글로벌 창의인’이라고 정의한 뒤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자율화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능시험 개편 ▲교원 학교별 임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선 “미래형 교육과정의 다른 이름은 학교중심 자율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독점의 관행에서 보면 혁명적인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마다 여러 교육 프로그램, 자료, 방법 등을 앞다퉀 개발해 시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 등과 관련해 박 회장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공립학교 교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의 과목은 전담교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환 광주일보 여론대제부장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사교육 시장을 현재보다 50% 이상 줄인다는 등 구체적인 입안자가 필요하다”면서 “방과후 학교와 학교 수업의 질적 성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 초출범한 교육과정특위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환 광주일보 여론대제부장은 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사교육 시장을 현재보다 50% 이상 줄인다는 등 구체적인 입안자가 필요하다”면서 “방과후 학교와 학교 수업의 질적 성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 초출범한 교육과정특위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달 서울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병선기자 lucky@kwangju.co.kr

시설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 납득 안 된다

조선대가 또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가 학내 구성원들의 결사반대에도 23일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키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우려와 함께 그 의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2007년 6월 임시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했던 교과부와 사분위가 현정권 들어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임시이사 파견으로 입장을 선회한 점이 납득 안 된다. 조선대 구성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옛 경영진의 복귀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이번엔 선임된 임시이사 가운데 상당수가 우파성향이거나 옛 재단과 가까운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임시이사 재파견으로 인해 벌어진 조선대의 극심한 혼란도 걱정이 된다. 벌써 조선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

파견을 막기 위해 수업거부, 파업 등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교과부와 사분위는 오히려 학내 분규를 부추겼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인 조선대가 학내 분규로 몸살을 앓는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조선대의 파행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군사독재시절의 80년 내치러 시위와 농성으로 날을 지새우는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는가.

각종 비리에 얽혀 물러난 옛 경영진의 복귀는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을 부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교과부와 사분위의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단 내려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정당 공천이 국회의원 1인 독점 공천으로 변질되면서 각종 폐해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등 10개 단체는 23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광주·전남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추악한 정치문화를 조장하는 정당공천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광주·전남 본부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정당 책임정치와 지방토호세력 견제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출서기와 ‘뒷돈거래’ 등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대한 공천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지역 의대의원·당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해당 국회의원의 측근이나 친척들이다. 말이 정당 공천 제도이지 국회의원 1인 공천제도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에게 잘 보이려는 출서기와 뒷돈 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지역 민생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은 ‘관심 밖’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당공천폐지운동이 실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 부패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나서기 위해 ‘뒷돈거래’ 등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현재 시장·군수·

구청장과 시·군·구의원에 대한 공천은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지역 의대의원·당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지만, 이들 대다수가 해당 국회의원의 측근이나 친척들이다. 말이 정당 공천 제도이지 국회의원 1인 공천제도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에게 잘 보이려는 출서기와 뒷돈 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작 지역 민생은 뒷전이라는 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은 ‘관심 밖’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당공천폐지운동이 실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 부패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나서기 위해 ‘뒷돈거래’ 등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현재 시장·군수·

함평 나비축제 개막

화려한 나비와 신비한 곤충, 아름다운 꽃들이 어우러진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열었다.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는 24일 나비축제 현장인 함평엑스포공원 정문 광장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크리스찬 키르쉬(세계델피위원회 사무총장)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명예대회장, 이석형 함평군수를 비롯한 30여명의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하고 17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시작된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10일까지 17일간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계속된다.

러 대통령, 김정일에 친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2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통장관이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라브로프 장관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북한 것으로 미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화부 1차관 신재민 2차관 김대기



신재민 1차관



김대기 2차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제2차관에 김대기(53) 현 통계청장을 내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신재민 제1차관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부 제1차관은 문화·예술, 관광 정책 등을 담당하며, 정부 부대변인을 겸하는 제2차관은 종교, 체육, 홍보 정책 등을 관장한다.

박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박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산층 키우기를 위한 ‘휴먼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제도적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 사·도가 조례를 통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제 단속에 나설 경우 일선 학원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과 사교육시장의 음습화 심화 등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

욱이 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정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입법과정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 한나라당과 한달 이상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학원 심야교습 단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반영한 것이어서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못하게 할 것”



24일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을 찾은 김대중 전대통령 내외가 농민들의 항쟁을 형상화한 부조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하의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 “민주주의 위기… 방관 말고 행동할 때”

14년만에 고향 하의도 방문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년 만에 찾은 고향 신안 하의도에 하늘도 반기듯 단비가 내려 목마는 대지를 적셨다.

김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9시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1시간 남짓 바닷길을 달려 꿈에 그리던 하의도에 도착했다. 김 전 대통령은 선상에서 멀리 하의도가 보이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동심에 젖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의도 응곡 선착장에 도착하자 미리 나와 기다리던 친척과 주민 100여 명이 ‘김대중’을 연호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선상으로 이동해 둘째아들 흥업, 조카 관선 씨 등 친척들과 함

께 예를 올리고 현관 글씨를 직접 써 보낸 ‘하의 3도 농민운동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개관식 인사말에서 “하의 3도 토지탈환운동은 동학농민운동과 더불어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운동이다”며 “하의 3도 농민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농민운동기념관 부지에 기념식수를 한 뒤 기념관을 둘러봤으며, 방명록에 ‘事人如天’(사인여천 : 하늘을 공경하듯 사람을 공경하라)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큰 바위 얼굴’ 형상의 섬을 둘러보고 모교인 하의초등학교를 방문, 후배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고 “하의

초등학교는 인생의 출발점이자 성공의 뿌리가 된 학교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하의초등학교 강당에서 “민주주의가 또 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절대 방심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과 함께 흥어와 미역국 등으로 점심을 마친 김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향문을 배웠던 덕봉강당과 후광리 생가 등을 둘러봤다. 김 전 대통령은 생가 방문을 끝으로 5시간여 동안의 짧고도 아쉬운 고향 방문을 마친 뒤 KTX 권으로 상경했다.

이날 방문은 김 전 대통령이 아태재단 이사장이던 지난 1995년 6월 하의도를 찾은 이후 14년 만이다. /*하의도=박종욱기자 jwpark@



법원이 24일 옛 전남도청 철거 반대 농성중인 5·18 단체를 상대로 강제 집행에 들어가자 신영진 5·18 비상지휘장(사진 맨 왼쪽)이 집행관들을 막아선 뒤 강제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구 도청별관 농성장 강제 집행

5월 유족 저지로 고시 못해

법원이 24일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농성중인 5·18단체와 이들이 도청 안에 설치한 농성장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을 돌렸다. 법원은 조만간 공권력 등을 동원해 농성선과 철거, 농성장 퇴거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집행관 6명은 24일 오전 11시30분께 옛 도청 안에 설치된 5·18 단체 농성장을 방문, 농성장 안의 물품을 확인하고 법원의 강제 철거 결정을 알리는 고시문을 부착하려 했다.

그러나 농성 중이던 5·18 유족회, 5·18 부상자회원들은 집행관들과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며 고시문 게재를 막았다. 결국 집행관들은 고시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별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절차상 법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 농성장 안의 물품을 확인하고 법원의 강제 철거 결정을 알리는 고시문을 부착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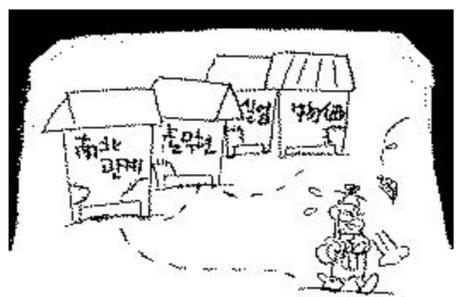
그러나 농성 중이던 5·18 유족회, 5·18 부상자회원들은 집행관들과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이며 고시문 게재를 막았다. 결국 집행관들은 고시문을 게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별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절차상 법집행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즐거워 일은 눈짓고 찾아도 없다

1분기 성장률 -4.3% ... 換亂后 최악

한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침체 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대비 성장률은 소폭의 플러스로 반전돼 경기의 급강하는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09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실질 GDP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해 지난해 4분기(-3.4%)에 이어 ‘역성장’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998년 4분기(-6.0%) 이후 최악이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0.1%로, 작년 4분기의 큰 폭 마이너스(-5.1%)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성장률은 한은이 예상했던 1분기 성

장률(전기 대비 0.2%, 작년 동기 대비 -4.2%) 보다는 0.1%포인트씩 각각 낮아진 수치다.

우리 경제를 부문별로 보면 작년 4분기 때 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대부분 지표들은 여전히 혼란 이후 최악의 상태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비내구재를 제외한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모두 늘어난 전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6%를 기록, 1998년 4분기(-13.4%) 이후 가장 낮았다.

수출은 운수 장비와 기계 등의 부진으로 전기 대비 3.4% 감소했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14.1% 줄었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7-9500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대제부 2200-679 <F A X> 227-9531	경제부 2200-641 <F A X> 227-9531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